특별세션 I

불가사의한 나라: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한국의 역할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이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달성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상위에 속하는 경제력을 가진 모범국가가 되었다. 특별세션I에서는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에 내재한 잠재력은 무엇이며,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작가, 다니엘 튜더를 통해 들어 보았다.

사회
강지영 JTBC 아나운서

발표
다니엘 튜더 작가 · 사업가 · 前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선진국' 병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많은 한국 사람에게 한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한국인이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가짜 선진국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교수로 있는 내 친구가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슬픈 기분이 들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나와야 할 표현은 자괴감이 아니라 끔찍하다, 유감스럽다, 애도를 표한다 등이 적절할 것인데 말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후진국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을 바라보노라면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느라 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많은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성급함만 앞선 듯하다. 목표 달성에 대한 과욕으로 다른 나라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집착하는 선진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부자인 나라? 인프라가 발전한 나라? 아니다. 선진국이란 국민 개개인을 동등하게 대하고 성공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국가를 뜻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선진국이라 자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즉, 선진국과 후진국을 분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을 스스로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탄하며 서방을 따라 잡으려는 경쟁심리가 팽배해 있고, 이 때문에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생략하는 지름길을 추구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안전이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화두로 한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 '괜찮아'의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기업과 정부 당국이 안전 문제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번 사건의 밑바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리더십 부재나 기업의 탐욕 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제도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친구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세월호 사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이었는데도 정작 내 친구는 9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안전 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안전시설 없이 방치된 도로 위 공사 현장, 뒷좌석 안전벨트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택시에,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폭주하는 택시나 버스 운전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들에게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기 일쑤다. 바로 '괜찮아' 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마초적인 정서가 묻어나는 한국의 '괜찮아'의식에 본인도 종종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비해 본인의 모국인 영국의 안전 보건 규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모든 것이 엄격한 규제 및 법의 틀 안에 존재한다. 짜증 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지키는 데는 정서적인 부분이 작용한다. 음주운전을 생각해보자. 음주운전은 위험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음주운전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이에 대해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정서는 뿌리박힌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3, 40년 전의 영국도 음주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공 캠페인과 공익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하지만 '괜찮아'문화가 문제이다. 이제는 '안 괜찮아'캠페인이 필요할 때다. 안전을 중시하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대중들은 분노해야 하며, 이로써 안전을 무시한 행위가 사회적인 수치심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의 경우,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는 이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가 많다. 세월호를 예로 들면, 낡은 중고 선박 구입, 무단 개조, 적정 화물 기준 초과 적재, 경험 없는 비정규직 고용 등이 문제였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하는 버스 기사,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배달기사 등이 모두 돈을 아끼기 위한 고용주들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최근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난 안전규칙 위반 건수는 7,000건 이상이었고,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29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한국의 13분의 1 수준이다. 엄격한 법률 적용 덕분이다. 최근 발생한 종합터미널 화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제2롯데월드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100개 이상의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이 발언이 사실이더라도 구속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권력층들을 상대할 때는 더 그렇다.

규제 당국과 규제 대상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문제이다. 기자로 있으면서 금융규제 당국과 은행장 모임을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다. 밀렵꾼과 이를 감시하는 사람 사이가 이렇게 친해도 될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를 영어로 Financial Service Commission이라고 한단다. 혹자는 여기서 Service란 금융업계에 대한 봉사라고 농담조로 표현하기도 한다. 당연히 틀린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금융권이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큰 어려움 없이 벗어날 수 있었던 한국도 메가 뱅크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메가 뱅크들을 과연 누가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과 규제 당국 간의 친근한 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이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인지 실질적인 책임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러났던 정치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국 내의 정치인에 대한 기준은 학벌, 재력 등에 많이 좌우되는 듯하다. 많이 배우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에 모인 분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 후 면담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국회의원 구성 비율을 보면 기업인이나 사회활동가 출신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법조인, 교수, 직업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 중 다수는 말만 아름답고 진심은 부족할 수 있다.

분노하고 행동하라

세월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해경 선발 자격 요건 중 대졸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4.0점인데 비해 수영 능력에 주는 가산점은 2.5점이다. 한국의 대학, 엘리트 교육 강조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해경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격 요건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비관하고, 분노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런 분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변화에 능숙하다. 남아선호사상의 역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 등이 이를 증명한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이 안고 있는 안전 부실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엄격한 규칙 적용과 더불어 안전 규제를 무시하는 행태는 엄벌에 처하고, 만천하에 공개하여, 사회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사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 해외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전반적인 안전 기준 및 장치를 대폭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완전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김영란법'의 추진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단합시키고 조직화해야 한다. 여기서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의

도입이다.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사진을 찍어 이를 공개하고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적 처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안전을 무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맨체스터 출신의 한 친구는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해 삼겹살 식당을 현지에 내고 싶어 했다. 삼겹살 식당은 개방형 그릴이 필수여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설비 도입을 도와주려 했지만, 친구로부터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영국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단다. 영국의 보건 안전 규칙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한국은 간혹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이를 막으려면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분노를 참지 마라. 하지만 분노에는 초점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한국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통해 본 세계 속의 한국 교육

중앙일보

한국은 OECD가 2000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OECD 국가 15세 학생들의 학업 능력(읽기 · 수학 · 과학)을 평가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2012년 평가에서는 수학 · 과학 · 읽기 등 모든 학업성취도 항목에서 65국 중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PISA 평가 항목 일부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 주입식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부정적 이미지와 상반되는 추이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평등성 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력 등이 그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특파원 출신 국내외 기자와 함께, 해외 사례와 PISA 결과를 토대로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았다. 또 PISA 결과가 단순한 순위를 넘어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사회
민경석 세종대학교 교수

토론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
박소영 중앙일보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파트 · 글로벌협력팀장
천멍 중국국제방송 서울지국장
다니엘 튜더 前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

정리
정고은나래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대리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도쿄지국장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도는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과 비슷한 교육 시스템을 가진 일본의 경우, 85.4%에 달하는 학생이 행복하다고 답한 것을 들며 엄격하고 치열한 시험제도 때문에 학생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행복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결석률이 28%에 달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 안 가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예로 한국 학생들이 문제 해결 시 얼마나 마음을 여는지를 보는 사고 유연성에서는 마이너스대 성적을 받았지만 수학 성취도에서는 1등을 기록한 사례를 제시했다. 패클러 지국장은 PISA의 전반적인 결과에서 국가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언론에